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김동영



행정자치부가 도입키로 한 '지방 영향 평가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방 영향평가제'는 정부가 각종 규제정책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비수도권이 받고 있는 불이익을 개선하려는 제도다. 모든 법률의 제·개정 및 정책의 시행에 앞서 입법과정에서 지방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해 수도권과 차별 적용한다는 것이다.

'지방 영향평가제'는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는 정책을 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문제는 중앙의 편향된 시각이다. 서울 등 수도권은 '지방 영향평가제'가 시장논리를 무시한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재정사업과 기업의 투자를 비수도권으로 유도해 수도권이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각종 규제 일률 적용이 문제

시장논리가 만능일 수는 없다. 수도권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논리다.

시장논리에만 맡겨서는 국가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특히 효율성을 내세워 국토의 균형발전정책까지 시장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지방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

각종 규제정책의 일률 적용에 따른 비

'지방' 죽이는 시장논리 안된다

수도권의 피해는 심각하다. 대표적인 것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부동산정책이다. 정부는 부동산값을 잡기 위해 지난 2002년 투기과열지구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라 광주시 전역을 비롯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문제는 경직된 운용이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정만 있었을 뿐 해제된 지역은 한 곳도 없다. 광주와 부산 등 주택가격이 안정돼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곳이 적지 않은데도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와 부산시 등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를 건설교통부에 건의했지만 정부는 '해제 불가'를 고집하고 있다.

요건이 소멸됐으면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순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은 주택투기와 전매행위가 성행하고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으로 2개월간 정기경쟁률이 5대1을 넘는 지역 등이다. 광주시는 지난 2003년 11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이전 어디에도 투기과열의 조짐이 없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3.1%로 물가상승률 2.4%보다 현저하게 높지 않고 정약경

평률도 1.5대 1에 불과하다. 투기와 전매 행위는 오래 전에 사라졌고 미분양 아파트만 1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건교부가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후유증은 심각하다. 지방의 건설과 주택경기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경기가 침체된 만큼 지역경제도 불황에 빠져 있다. 지역경제가 위축되면서 소비와 고용시장 등도 얼어붙어 지역사회 전체가 활력을 잃고 있다.

지방의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은 수두

룩하다. 총부자 상환비율(DTI) 규제, 분양가 상한제 등도 서울 강남권과 경기 과천, 분당, 용인 등 집값 폭등의 진원지인 이른바 벌을 세븐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이지만 전국적으로 일을 적용돼 지방의 피해가 심각하다. 비수도권이 서울과 수도권을 겨냥한 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해제해야

수도권의 비례화는 '저효율-고비용'의 부작용을 낳는다.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48.3%, 총생산의 47.4%, 전체 제조업체의 47%, 100대 대기업의 91%가 집중되어 있는 나라가 정상일 수는 없다. 수도권의 인구비중이 오는 2020년 52%를 넘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공화국'인 셈이다.

수도권이 거대 비만증 환자라면 광주와 전남 등 지방은 뼈골만 남아 빙사상태에서 허덕이는 중증 환자다. 증상이 다르면 처방도 달리야 한다. 수도권을 향한 각종 규제를 지방에 강요하는 것은 지방의 숨통을 옥죄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확실한 '지방 영향평가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장논리는 위기의 지방을 살릴 수 없다.

〈논설장〉 dykim@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편칼럼

정범도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이 공약을 외다투어 내놓고 있다. 그런데 현재 드러난 각 후보들의 공약들을 살펴보면 이명박씨의 경부운하건설을 중심으로 한 토건국가론과 박근혜씨의 한종열차 폐리를 중심으로 한 물류국가론이 이외에 뚜렷한 정책비전이 보이질 않는다.

오늘의 한국경제는 여려 면에서 전환기에 처해있다. 제조업은 엔터와 기술경쟁력을 앞세운 일본과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사이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확산에 따른 경쟁경쟁력으로 승자독식의 원칙이 관철되면서 양극화가 더 이상 방지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우리 경제의 난제들은 토목사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이 공약을 외다투어 내놓고 있다. 그런데 우리 주류 경제학자나 정책당국에서는 이미 1등이 된 선진국들이 그 1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내놓은 이른바 '글로벌 스텐드', 다시 말해 영미식 자본주의를 추구하면서 우리 경제를 신자유주의의 경쟁으로 몰고 있다. 이제 우리는 박정희 개발모델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한국식 발전모델의 정립이 절실히 하고 하겠다. 그리고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와 금융자본의 해외유출에 대해서도 이제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해 한국사회는 론스타에 의해 환행을 험하게 되었다. 시비로 국내에

행을 험하게 되었다. 시비로 국내에

대선공약과 차기정부에서 국가의 역할

업이나 물류기지 구축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 아니다. 현재 대선후보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상황판단이 너무 안하고 전략에서 차기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한국경제에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전환기의 한국경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위기관리와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한국경제가 지향해야 할 '선진경제'에 대한 모델획립과 거기에 따른 국가의 역할에 대한 정립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 한국에서는 대선후보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나 학계, 시민 사회내에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매우 부족하다.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해서 선진경제로 진입하려면 한국적 산업정책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선진국의 경제발전과정을 보면 어느 후발국이든 선진국을 추격하기 위

여적으로 시끄러운 한해를 보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은행 매각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원칙이 적용되는 한 우리은행 각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외국자본에 협력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기업의 좋은 자배구조는 주인있는 지배구조이다. 그런데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우파적인 영미식 주인없는 주주주본주의를 주장하면서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 정부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정비도 서둘어야 할 것이다. 〈광주시환경시설공단 상임이사·2006년 7월 수상자〉

은편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편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학용품도 생활용품처럼 리필 제품 생산했으면

어린이 학용품에 리필 제품을 판매했으면 좋겠다.

크레파스의 경우 플라스틱 케이스 크기만 가로 24cm 세로 18cm나 된다. 여기에 크레파스는 24색 정도가 들어간다. 이 종 많이 쓰이는 색깔을 따로 판매하지 않아 부족한 몇 색깔 때문에 결국 절반도 못쓰고 다시 사야만 한다. 물감도 마찬가지로 케이스가 물감 내용물보다 몇곱절 크고 무겁다.

특히 크레파스는 종이로 싸놨지만 물감은 금속인 닦이나 고무튜브로 만들어져 썩지도 않는다. 아마 몇 년은 흘려야 썩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기회에 학용품 판매 관련 회사에서는 아이들이 자주 쓰는 크레파스나 물감 등 학용품이 리필 가능하도록 신속히 제품을 생산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우도형·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기고

이상옥

보건복지부는 국제결혼의 피해 방지를 위해 국제결혼증개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연구 용역을 주어 다른 사회 가정지원법을 마련하고 있고 행정자치부는 시, 도 및 시, 군, 구별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토록 시달 했다.

국회 고경화의원은 이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월 중 확정해서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국제 결혼증개법은 이주여성들이 당하는 사기에 대한 대책이

지시과제를 내각에 내렸다. 그러나 최근 발표되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법안은 당시 여성결혼이민자와 이주외국인근로자들을 같은 맥락으로 입법화 되고 있다. 이주외국인근로자 문제를 편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고 여성결혼이민자 가족문제는 외국인 이주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편과 시부모, 아이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주여성과 결혼한 남성들은 좋은 결혼 조건을 갖지 못한 사람 많다. 그러

이주여성 입법에 남편과 영·유아 대책 필요

부족하다. 미국처럼 국가가 결혼하려는 상대국 국민에게 그 사람의 신용정보와 범죄기록, 건강 등에 관한 사항을 그 나라 글로 쓰고 반드시 그 나라 말로 읽어주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여성가족부가 용역을 주어 마련된 것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정책을 다루는 법률 또는 법률안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다는 것이다. 또 행정자치부의 거주외국인지원표준조례안 역시 결혼이주여성을 외국인으로 보고 지원 조례를 만들라는 것이다. 국회 고경화의원의 입법안도 법무부의 외국인 정책 범위 내에서 마련되고 있으며 법안의 적용을 결혼이민자와 이주외국인근로자, 난민, 재외국적동포를 함께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2005년 5월 이민자 가족의 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자 외국인 이주여성자녀의 인권 실태를 과학하고 차별 개선을 추진하라는

〈사〉이주가족복지회 이사장〉

출산 장려한다면 공기업 가족수당 제한 모순

남편이 얼마전 모 공기업에 취직했다. 집에서 남편과 얘기 나누던 중 남편은 정부가 디자인 출산을 장려한다면 아파트 특별 공급같은 정책을 꾀하고 있는데 정작 다른데도 아닌 공기업에서 영동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금전법을 개정해서 삼성이나 POSCO같은 자금여력이 있는 국내의 산업자본이 은행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

세 자녀라면 오히려 더 많은 가족수당을 지급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아예 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의 이같은 모순된 제도는 즉시 고쳐져야 할 것이다.

▲이은숙·광주시 북구 지야동

다. 엄청난 사교육비를 생각하면 가족 수당 3만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 때문에 셧아이는 해당이 없다니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다.

적은 금액이나마 주지 않는 것은 디자인 출산 정책을 비웃고 있는 끝이다.

세 자녀라면 오히려 더 많은 가족수당을 지급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아예 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의 이같은 모순된 제도는 즉시 고쳐져야 할 것이다.

▲이은숙·광주시 북구 지야동

남편이 디자인 공기업에서는 가족수당을 3인까지 밖에 안준다고 한다. 3인이면 부인과 자녀 2명까지 해당되는 것이다. 자녀가 3명인 우리 집의 경우 한 아이에 대한 수당은 받지 못하는 셈이다.

여기서는 디자인 1인당 3만원 뿐이

시설

광주지법 '전관예우 규제' 실천이 중요하다

최근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판결에 불만을 품은 소송당사자가 판사에 테러를 저행하는가 하면, 현직 부장판사가 사법부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에게 사법불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임문에 결단을 촉구할 지경에 이르렀다.

광주지법은 20일 "법원에 근무하다 개인한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벌인 사법부의 직원이나 변호인은 법원에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상하는 법원에 고발해졌다. 광주지법은 20일 "법원에 근무하다 개인한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벌인 사법부의 직원이나 변호인은 법원에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상하는 법원에 고발해졌다.

광주지법은 20일 "법원에 근무하다 개인한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벌인 사법부의 직원이나 변호인은 법원에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상하는 법원에 고발해졌다.

법원은 또 노동분쟁제와 위증·무고·전담 재판부를 신설하고 공판중심주의와 구속심리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재판부 2곳을 증설하는 등 사법분단을 대폭 개선했다. 또 문제는 됐던 개인파산·회생 사건과 관련, 해당 분야에 경험 많은 부장판사 2명을 배치했다.

교원평가 결과 인사·승진에 반영해야

교육부가 교원평가제 시범운영 학교 506곳을 선정, 발표했다. 내년 3월 전국 초·중·고교 40여만명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하기에 앞서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시범운영 대상을 지난해보다 6배 정도 확대하고 교원평가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다음달부터 시범운영되는 교원평가제에서 주목되는 것은 단기평가제의 도입이다. 교사들은 교장과 교감이 이외에 도교교사와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평가를 받게 된다. 수업지도 및 학교생활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한 간접평가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3년으로 잡은 평가 주기도 단축해야 한다.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서 1년 단위의 직무평가가 일반적이다. 3년에 한번 평가를 해선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최소한 1년 단위로 평가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제의 시범나만 해서는 안된다. 교원평가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이다. 정부는 제대로 된 교원평가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교원평가는 교원평가제의 시범나만 해서는 안된다. 교원평가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이다. 정부는 제대로 된 교원평가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미국에서 고급질의 인공 다이아몬드가 본격 판매되기 시작해 다이아몬드 시장의 오랜 기득권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한 외신은 '보석전쟁'이라 불리우고 있다. 최근에는 그만 커지고 있다고 한다.

기존 업계는 '피의 다이아몬드' 악몽을 떨쳐나온다. 또 한 번 타격을 입게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1866년 시에라리온에서 대규모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면서 시작된 '피의 역사'

2002년 유엔 평화유지군이 개입하기까지 무려 370만명이 목숨을 잃고서야